제원아파트 재건축 재심의… 이번엔 통과될까

도 도시계획위, 오는 13일 세번째 심의 예정
중앙도로 폐도에 따른 구체적 계획 제시 관건

올해 두차례 제동이 걸린 제주시 연동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3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올해 세번째 심의로, 앞서 지난 7월과 10월 두차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도시계획위는 아파트 단지 내 동서방향도로 약 350m 폐도 계획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계획위는 첫 심의에서는 ▷폐도 시 공공기여방안 구체적 제시 ▷주거환경 개선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일조권, 소음저감 방안 등) ▷근린생활시설 규모 등 건축물 용도계획 내용 제시 ▷구역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재검토(교통량, 패턴 및 교량 고려) ▷주변도로변 양측 보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제시 ▷인접 블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반영(주민의견 등)하는 등의 6가지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두번째 심의에서도 제원아파트를 관통하는 중앙 도로를 폐도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이를 활용할 구체적인 검토 결과 제시 등을 요구했다.

1979년 준공된 제원아파트는 22개동 656세대로 제주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이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최고 15층, 14개동 752세대로 신축하는게 골자다. 당초 874세대로 계획했지만 경관심의 과정에서 3차례의 재심의 끝에 122세대를 줄여 통과됐다.

만약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을 고시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밟게 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안덕면 생활체육관 운동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조잔디 교체사업. 이태윤기자

'천연→인조잔디' 교체되는 마을운동장

서귀포시 읍면 운동장 4곳 최근 인조잔디로 교체 완료
"천연잔디보다 회전율 높아"
부상 유발가능성 높아 우려도
"장단점 다른 만큼 신중 검토"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소재한 마을운동장이 천연잔디 구장에서 인조잔디 구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겨울스포츠 메카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읍·면 지역에는 대정읍, 안덕면,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지역에 각각 마을운동장이 조성돼 있다. 이중 성산읍을 제외한 대정읍, 남원읍, 표선면 소재 마을운동장은 최근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교체를 완료한 상태다. 또 안덕면은 올해 10월부터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마을운동장의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읍·면 지역의 마을운동장이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교체되는 이유는 인조잔디 구장이 천연잔디 구장보다 날씨의 영향을 덜 받고 구장 사용 시 회전율도 높아 시설 사용 등에 있어 장점이 많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과거 서귀포 읍·면 지역에 마을운동장을 조성할 당시 천연잔디로 사용됐던 잔디는 난지형 잔디로, 겨울철에는 고사되고 우천 시 구장에 진흙이 생기는 등 노면이 고르지 못해 이용객들의 부상 위험도가 높아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때문에 최근에는 읍·면 마을운동장은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교체되는 추세이며, 인조잔디로 교체될 경우 애로사항 등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천연잔디 구장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도내 체육분야 관련 관계자는 "인조잔디 구장은 마찰에 의한 찰과상이나 화상이 빈번하고 충격흡수율이 저조해 오히려 부상 유발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며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장단점이 서로 다른만큼 신중한 검토 등을 거쳐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서귀포시 경기침체에 자영업자도 힘들다

11월 현재 음식점 258곳 폐업
5년새 최대… 창업 대비 늘어
소비위축·동종업계간 경쟁 탓
커피숍·단란주점 폐업도 증가

서귀포지역의 1차생산품 가격 하락과 부동산경기 부진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올들어 폐업하는 식당과 카페 등 휴게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다. 또 음주문화의 변화 등으로 단란주점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11월말까지 시 관내에서 폐업한 일반음식점은 258곳으로 지난 한해 폐업한 190곳을 훌쩍 넘어섰다. 올들어 새로 문을 연 일반음식점이 497곳인 점을 감안하면 식당 2곳이 문을 여는 동안 1곳꼴로 문을 닫은 것으로, 일반음식점 폐업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151곳에서 2017년 188곳으로 증가 추세다.

또 ▷2015년 창업 431·폐업 151곳 ▷2016년 창업 512·폐업 151곳 ▷2017년 창업 611·폐업 188곳 ▷2018년 창업 493·폐업 190곳임을 감안하면 음식점 창업 대비 폐업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취업난에 젊은층은 물론 은퇴자들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음식점 창업에 뛰어들지만 최근 심화된 경기침체에다 동종업계간 경쟁 등이 겹치며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도심은 물론 읍면동 곳곳에 앞다퉈 생겨났던 카페와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의 폐업도 2015년 74곳에서 2017년 100곳, 올해는 11월까지 116곳으로 나타났다.

지역경기 침체와 직장인들의 회식문화 변화 등으로 단란주점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신규로 허가받는 업소는 드문 반면 경영난으로 자진폐업하거나 업종변경이 늘고 있는 추세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귀포시에서 신규로 허가받은 단란주점은 6곳에 그쳤다. 반면 이 기간은 19곳이 폐업했는데, 올들어서만 7곳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경기 호조세와 유입인구 증가세를 업고 최근 몇년 새 음식점과 카페 창업에 뛰어든 이들이 많았는데, 지난해부터 경기침체와 유입인구가 정체되면서 창업하는 한쪽에선 문을 닫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정착·지역주민 한자리에" 남원체육관서 페스티벌

2019 서귀포시 귀농귀촌인&지역주민화합페스티벌 행사가 지난 7일 남원생활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귀포시, 서귀포시도시민유치지원센터와 서귀포시귀농귀촌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내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것으로 귀농귀촌인 등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소통과 유대강화는 물론 상생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 서귀포시 남원생활체육관에서 열린 '2019서귀포시 귀농귀촌인&지역주민화합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제주어 골든벨 퀴즈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이날 행사에서는 읍면동 화합시책 사례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동아리 문화공연, 제주어 골든벨 퀴즈대회, 빅런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귀농귀촌 고충상담, 지역주민과의 화합시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착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화합에 적극적인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제주시, 2058어가에 지급

제주시는 올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2058어가를 선정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예산 13억3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어가 당 지원 금액은 65만원이며, 이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어가 선정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중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외 대상 어가를 검증하고 선정했다. 고대로기자

양돈장 폐업 지원… 타 업종 전환 자립 마련

제주시는 양돈장 주변 유입 인구 확산에 따라 냄새저감 능력이 취약한 노약자 및 소규모 영세농을 대상으로 타 업종 전환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양돈장 총 3개소에 8억원(우도·한경면)을 투입해 폐업 철거 후 농업용 창고, 공공버스 차고지 등으로 이용토록 했다. 내년에도 양돈장 폐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타 업종전환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양돈장 폐업지원은 폐업 희망신청 농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해 보상금을 산출하고 폐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대상농가는 돼지를 모두 출하해 농장 내 돼지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아야 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허가받은 축산업 등록증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냄새저감과 가축 방역 등 관리에 한계가 있는 고령의 영세농가가 운영하는 양돈장에 대해서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